장고끝 정면돌파 카드…정국 주도·검찰개혁 승부수

■문 대통령 임명 배경과 전망

핵심 지지층 이탈 위기감 작용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예고
수사 결과 따른 여론 악화 부담
야당 강력 반발 정국 '시계 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한달 가까이 여야를 넘어 진영 간 극한대치가 벌어졌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임명안에 전격 서명하면서 이제 국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문 대통령이 고민 끝에 정면돌파 카드를 통해 국정운영 동력을 유지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 고민은 예상보다 길었다. 지난 6월 인사검증이 이뤄졌을 때부터 8·9 개각명단이 발표될 때까지 문 대통령이 조 신임 장관을 최종 임명하리라는 것은 기정사실로 여겨졌다. 그러나 개각 직후부터 딸 입시·웅동학원·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설상가상으로 검찰 수사까지 속도를 내며 문 대통령은 막판까지 임명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끝내 문 대통령이 정면돌파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여기서 물러나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신임 장관이 현재 국회로 넘어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안 등을 설계한 주역이며, 문 대통령으로부터 이 개혁안들의 입법이 완성되는 것을 최전선에서 끌고 갈 적임자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개혁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조 신임 장관이 검찰의 수사와 야당의 반대 속에 낙마한다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국 장관의 낙마는 검찰 개혁 좌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국 후보자 지명 철회가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이번 결단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한번 신뢰를 준 참모에 대해서는 끝까지 믿고 기용하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엿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을 계기로 집권 중반기 국정과제 이행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함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도 함께 임명하며 8·9 개각 발표 이후 한달 만에 내각 정비를 매듭지었다. 특히,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와 검찰의 정면충돌 양상까지 노출된 만큼 강력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부담도 클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우선 조 신임 장관 관련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가장 큰 뇌관으로 꼽힌다. 검찰은 이날도 조 신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여론의 향방도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만에 하나 추가적인 의혹이 터져 나오거나 이제까지 제기된 의혹 가운데 위법이 확인되기라도 한다면 여론의 급격한 악화를 불러올 우려도 있다. 조 신임 장관의 신뢰가 추락하면서 검찰 개혁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이번 인선으로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각이 더욱 선명해지며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기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이번 인선에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향후 정기국회에서의 개혁법안 처리 역시 가시밭길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무엇보다 도 여권 내에서는 안보와 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결정이 중도층 민심 이탈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 상징 인물…검증 과정에서 '상처'

■법무장관 조국

검찰 수사따라 '가시밭길'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상징적 인물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험난한 곡절 끝에 9일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올랐다.

조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취임 직후부터 가까이서 보좌하며 '복심' 역할을 해왔다. 2012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은 조 장관은 2017년 대선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전격 지명된 이후 단숨에 존재감을 끌어올렸다.

학자 시절부터 선명한 진보성향을 보인 조 장관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도 '촛불 정신 구현'과 '적폐청산'을 강조하고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에서 SNS 여론전을 펼치며 '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정치적 무게감이 더해지자 조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고향인 부산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PK(부산·경남)는 물론 전체 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여권에서 나오기도 했다.

정계 진출에 고사 입장을 분명히 해 온 조 장관은 그러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되자마자 본인 주변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로 최악의 정치적 시련에 휘말렸다. 야당과 언론의 검증 과정 그리고 국회 정문회에서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특혜, 웅동학원 관련 의혹이 수도 없이 쏟아지면서 난타전이 본격화했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의 상징성과 정치적 무게감 등에서는 상당한 상처가 났다.

숱한 의혹과 검찰 수사를 뚫고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향후 조 장관의 정치 행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당분간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인 지난 5월 10일 삼청동의 한 식당에서 문 대통령과 식사한 뒤 함께 걷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 /연합뉴스

너무나 많은 의혹 제기 후 가족을 옥죄는 수사까지 시작돼 '만신창이'가 된 조 장관이 앞으로 적극적인 정치 행보를 펼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검찰 수사의 방향에 따라 조 장관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포토라인에 서는 최초의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개혁 동력마저 좌초돼 조 장관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조국 지명에서 임명까지…정국 들었다 놓은 '격랑의 한달'

각종 의혹에 우여곡절 끝 청문회
문 대통령 검찰 수사에도 임명

'문재인 대통령의 남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까지는 고난의 시간이 필요했다. '문(文)의 남자'라는 별칭이 붙은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됐을 때만 해도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조 장관이 사법개혁을 완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문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고 정부의 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임을 고려하면 장관 임명까지 야권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됐다. 그럼에도 SNS 등을 통해 기득권의 특권과 반칙을 비판하는 데 앞장서 온 조 장관이 낙마할 만한 도덕적 결격사유 등이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여권의 기대였다.

이런 기대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자료가 국회에 제출된 뒤로부터 조금씩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게 조 장관의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 약정을 한 사실이었다. 조 장관의 가족은 총재산 56억4244만원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을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출자하기로 투자 약정을 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가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블루코어가 관급공사인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에 투자해 매출을 올렸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 커졌다.

조 장관의 각종 의혹에 기름을 부은 것은 그의 딸을 둘러싼 논란이었다. 조 장관의 딸이 고교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점에 더해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할 때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반발이 거세졌다.

조 장관의 의혹을 둘러싼 공방 속에 여야는 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이 와중에 지난달 27일 검찰은 조 장관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대와 부산대 등 전국의 20여 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9월 2~3일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이마저도 증인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애초 약속했던 이틀에는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 청문회가 무산되자 여권에서는 의혹을 해소할 계기가 필요했고 조 장관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이른바 '셀프 청문회'라는 비판 속에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8시간 20분 동안 그간 제기됐던 의혹을 해명했다.

1일부터 동남아 3국 순방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3일 순방지에서 국회에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사이에 터져 나온 조 장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은 청와대와 조 장관을 더욱 궁지로 몰았다.

조 장관은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듯했으나 여야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인 6일에 청문회를 열기로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조 장관은 마침내 국회 청문회장에 서게 됐다.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의혹들을 다시 제기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 속에 청문회는 끝났으나 검찰이 청문회가 끝나는 시각에 맞춰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귀국해 참모들로부터 조 장관의 청문회 등 국내를 비운 사이에 있었던 사항들을 보고받으며 숙고에 들어갔다. 애초 임명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기류가 검찰의 기소로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결심은 바뀌지 않았고 문 대통령은 9일 오전 조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예정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인허가 및 시공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 (중흥동 665-29)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MODERN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